서울시 강남개발

주민 소환보다 여론 형성 '먼저'

'한전부지 · 강남개발 갈등' 조계종 대응변화 필요

봉은사 인근에 사찰환경 침해가 우려되는 축구장 60개 규모의 초대형 지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유래없는 대규모 사업 진행에 봉은사 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위원장 지현 · 원명, 이하 대책위)가 박원순 서울시장 주민소환운동 등을 대응책으로 추진 중에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범불교 차원의 문제의식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하도시 건립, 봉은사 지반약화 우려

서울시와 국토부는 11월 3일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들어서는 영동대로 일대에 지하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봉은사역과 삼성역 사이에 지하 6층의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면적이 42만㎡에 달한다.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에 강남 대표사찰인 봉은사의 수행환경은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봉은사 총무국장 법원 스님은 "105층의 GBC 건립시 일조량 침해와 빛 반사로 문화재 보존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하 대규모 개발로 인한 사찰환경 피해도 우려된다. 봉은사 신도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관련 개발에 대해 서울시에 항의서한을 보낸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봉은사 일대는 퇴적층으로 이뤄진 연약지반이기에 지질학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프랑스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진행된 '라데팡스'가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해 40년의 연구과정을 거친 것과 달리 봉은사 인근 개발은 불과 1년여 만에 광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제반 연구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주민소환운동 가능할까

현재 조계종은 한전부지 환수 운동과 함께 봉은사 인근 개발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주민소환운동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10월 10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GBC건립 사업 강행 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전개를 결의하는 등 강력 대응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에 봉은사 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는 11월 14일 주민소환운동 전문가를 채용하는 공고를 낸데 이어 24일부터 내부교육에 들어가는 등 관련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주민소환운동은 서명운동과 소환투표

지반침하 등 사찰 환경 피해 우려

주민소환 놓고 불교계 안팎 온도차

"범불교 여론 형성 미흡" 지적도

등에 많은 인원이 동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 10%가 서명으로 주민소환에 찬성하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주재 하에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다. 여기에서 서울시 인구의 1/3 이상이 참여해 투표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 2007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전국에서 단체장이 해임된 일은 단 한 건도 없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형남 법무법인 신아 대표변호사는 "강대강 대결 국면에서 상생관점에서 가능한 협의점이 사라질 것이 우려된다"며 "주민소환운동을 진행하면 중복서명과 주소지 미기입 등 여러 가지 누락 서명을 고려해 실효가 있으려면 서울시민 중 2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투표과정에서 자칫 불교계가 '어거지를 쓴다'는 국민적 오해와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봉석 대책위 대변인은 "주민소환운동은 현재 졸속으로 진행되는 GBC인허가를 막고, 봉은사 토지에 대한 군부정권의 강탈역사, 그리고 이후 개발의 불법성을 알리는 효과도 있다"며 "당위성이 충분하기에 성공 여부를 속단해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부지환수 등 당위성 홍보 선결 과제

대책위 측은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불교계 안팎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주민소환운동을 앞두고 더욱 더 국민과 서울시민에 대해 당위성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응 스님은 "반강제 수용에 대한 과거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고 종단 주체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봉은사 토지에 대한 환수 운동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종단이 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여론 조성,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심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응 스님은 천성산 단식 당시 단식운동과 함께 정토회 등 불교단체가 지하철 역사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점을 들며 불교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관련된 세미나 개최 · 연구작업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불교계시민사회단체장은 "군부정권 당시 봉은사 토지 매각 과정에 대한 명쾌한 해명부터 있어야 한다. 순수한 명분을 불자대중에게 먼저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해준 대책위 조직팀장는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일은 환수위 초기부터 고민해왔던 일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GBC 등의 개발 인허가가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돼 이를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국민 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천태종, 2017년 예산 377억 원 확정

11월 23일, 제101차 종의회서

천태종의 2017년도 예산이 377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는 11월 23일 단양 구인사 삼보당서 제101차 정기 종의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 총무원 등 집행부와 종단 산하기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종단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의 2017년 예산 총액은 377억300만원이다. 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서울 명락사 전통문화전승센터 건립 등 불사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종의회는 21일 개회 후 총무 · 법제 · 재무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담당기관의 예산안을 검토 · 심의했다.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도원 스님)는 △총무원 총무부 · 교무부 · 교육부 △기획실 · 전산국 △금강신문, 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유정 스님)는 △감사원 △규정부 △사회부 △천태종복지재단 △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 재무분과위원회(위원장 세운 스님)는 △천태종 세입세출 예산안 △천태종 특별 예산안 △재단법인 천태종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등의 예산안을 심의했다.

김주일 기자

本紙, 불기협상 취재 · 특별상 수상

한국불교기자협회, 11월 22일 수상작 발표

본지가 2016년 한국불교기자상 2개 부문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 이하 불기협)는 11월 21일 한국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홍사성 · 불교평론 편집주간) 회의를 거쳐, △선원빈 기자상 △취재보도 부문 △기획 · 해설 부문 △특별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出家
최고의 출가는 '發心출가'… 해답은 '수행'과 '전법'

본지 '출가 자유를 향한 길'과 '연중기획-카드뉴스'는 각각 취재보도 부문상과 특별상을 차지했다.

심사위원회는 '출가 자유를 향한 길'이 "출가자 감소 시대에 출가 진흥을 고민한 시의적절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연중기획-카드뉴스'는 "불교계 이슈를 그래픽 형식으로 재구성해 보도한 새로운 시도"라고 호평했다.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은 '국립중앙박물과서 홀대받는 국보 반가사유상'외 연속보도를 쓴 법보신문 남수연 기자에게 돌아갔다. 기획 · 해설 부문 수상작은 BTN 임상재 기자의 '불교, 경제를 품다'로 선정됐다.

이번 심사는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주간, 박경준 동국대 교수, 김택근 前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맡았다.

이에 앞서 불교기자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11월 7일 회의서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 · 남배현 법보신문 산하 모과나무 대표 · 심정섭 법보신문 산하 일일시호일 대표 · 남수연 법보신문 부장을 20주년 근속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은 12월 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보현실서 열린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불교담론 이끌 '불교미래포럼' 공식 출범

11월 21일, 통섭에 수불 스님 정책 · 사회 · 세계화위원회 구성



사회적 현안 해결방법을 불교적으로 모색하고, 한국불교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지식인 결집체가 발족됐다.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는 11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서 '불교미래포럼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불교미래포럼은 불자교수를 필두로 사회전반 각 분야서 활동하는 불자지성인들이 참여한다. 한국불교의제뿐만 아니라 시대 공통 사회이슈, 국가의제 등을 엄선해 적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조직된 교수불자연합회 독립기구다.

포럼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불교정책위원회'와 사회적 역할방안을 모색하는 '불교사회위원회', 한국불교 세계화 및 통불교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불교세계화위원회'로 구성된다. 포럼은 출범 초기 비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이후 정례화 할 예정이다.

상징적인 총재 역할인 '통섭(通攝)'은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추대됐으며, 초대회장은 심익섭 교불련 회장이 맡았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김성규 영남대 교수(정책위), 김대열 동국대 교수(사회위), 송운석 단국대 교수(세계화위)가 위촉됐다.

심익섭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제 한국불교 최고 지성인들이 불교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불교미래포럼을 출범시키고자 한다"며 "오늘의 작은 시작으로 지구적으로는 정쟁 없는 인류평화가, 국가적으로는 국정난제가 풀려 갈등을 넘어 신뢰사회로, 한국불교는 답답함을 털어내고 전통적인 불교지혜를 모아 새로운 도전을 찾아나가는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서원한다"고 강조했다.

통섭 수불 스님은 기념법어에서 "지금 한국불교는 안으로는 교세가 위축되고 있으며, 밖으로는 세계화의 거센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면서 "광범위한 지적역량과 보현행원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한국불교의 침체된 현 상황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불교미래포럼 창립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무행정 인재 양성 협력 강화"

조계종 · 동국대 업무협약

종무행정 인재 양성을 위해 조계종과 동국대가 힘을 모은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종호)은 11월 22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총무원과 종무행정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은 인재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종무행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총무원은 교육과정 이수자가 총무원을 비롯한 종단 각 기관 채용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동국대 불교대학 인재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종무행정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일시 : 2016. 11. 22(화) 02:00 장소 : 본원 로비스홀

동국대 불교대학장 종호 스님과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이 협약을 맺고 있다.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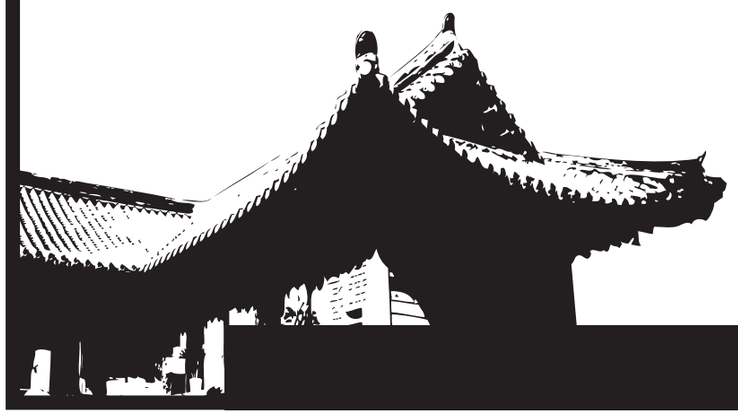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